

1993 년도 지방토론회(광주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 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청주에 이어 광주에서 그 지역의 언론계 · 학계 · 법조계 · 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를 초청 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93 년 7 월 6 일 광주 신양파크 호텔에서 열린 광주지방토론회에서는 이해복 위원(대한 언론인회 회장)의 「문민시대와 언론의 책임」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논문과 토론내용을 초록한 것이다…………편집자 주

문민시대와 언론의 책임

이해복

대한언론인회 회장 · 중재위원

지난 30 여 년간 군사정부하에서 규제와 간섭을 받던 한국언론은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아래서 민주언론의 제 위치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는 문민정부다운 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김 대통령 자신이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개혁의 동반자」로 지칭하였다. 이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과거와 같은 대립적 존재이거나 상호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에 동참하는 파트너) 관계로 규정 할 만큼 민주정부와 민주언론의 새로운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언론산업에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는 한편 그것을 바탕으로 언론을 길들이던 구시대적 발상」에서 탈피하겠다고 선언했고, 「언론산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윤리적 바탕 위에 바로서야 할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였는데 이 대목이야말로 언론기업을 주도하는 측에 대해 새로운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언론이 권력의 비호 아래 특혜를 누려온 일은 없는지, 공익을 위해 주어진 언론의 특권을 사익추구를 위해 오용한 사례는 없는지, 상업주의에 치우쳐 선정적, 폭로 성 보도로 언론 본래의 위상을 훼손케 한 일은 없었는지, 아직도 과거의 언론특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언론도 이제 새 시대의 언론답게 자기반성을 통한 자율개혁에 나서 야 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고 본다.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있던 시대에는 언론활동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보(과장, 왜곡, 편파보도)가 나올 수도 있었고, 그 책임을 외부(간섭요인)로 전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로운 언론활동이 최대한 보장된 문민시대에 오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언론이 져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아직도 오보가 속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정기간행물의 대폭적인 증가추세가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언론매체의 증가는 그만큼 오보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고 둘째는, 이처럼 대폭 늘어난 언론매체 종사자들 중에는 언론인으로서 충분한 훈련을 쌓지 못해, 취재능력이나 언론인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적 바탕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채 취재현장에 배치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정정보도 요구를 할 때 그 오보된 내용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즉각 성실, 명확하게 정정하는 겸허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호소에 매우 인색해 정정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당국에 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 직접 법에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사정바람」을 타고 보도경쟁이 치열해 그 와중에서 지나친 선정주의적 과장보도, 폭로 성 보도로 왕왕 인권침해(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등 실수를 자주 범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 할 경향이다. 최근 미확인 보도에 대해 정부당국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취재기자가 구속된 예는 근년에 드문 사건으로 주목해 야 할 점이다.

특히 문민정부 탄생 이후 언론환경이 전에 없이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무책임한 보도로 말썽을 빚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크게 반성, 시정하여야 할 점으로 지적돼 마땅하다. 물론 문민정부 수립 이후 독자란의 확대로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는가 하면 일부 신문에서 옴부즈맨전화제도까지 창설, 오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정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경향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선진국가의 유력 지들이 오보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지는 자세와 비교할 때 국내언론은 그와 같은 책임지는 자세 면에서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문은 오자, 오식까지도 다음날 지면에 꼬박 스스로 정정을 내고, 옴부즈맨을 두어 자사보도, 논평에 대한 독자들의 비판은 물론, 내부에서 스스로 비판, 지적한 내용까지도 공개보도 하는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의 도가 높다고 한다.

이웃 일본에서는 허위 조작된 보도로 책임을 지고 보도관련 기자와 책임부서의 장은 물론, 편집국장, 사장까지 줄줄이 물러난 예가 있으며, 일류 방송사의 총책임자가 방송내용이 문제되자 스스로 물러나 책임을 지는 예도 있었다.

이와 같은 책임 있는 언론자세가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아직 이취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자유로운 언론,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 참된 개혁의 시대도 열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언론이 「특권적 위치」를 고집하는 한 오늘의 개혁은 어느 한 구석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보성전문상과

□ 서울신문 사회부장,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KBS 해설주간, 동 연수원장 역임

□ 현재 대한언론인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